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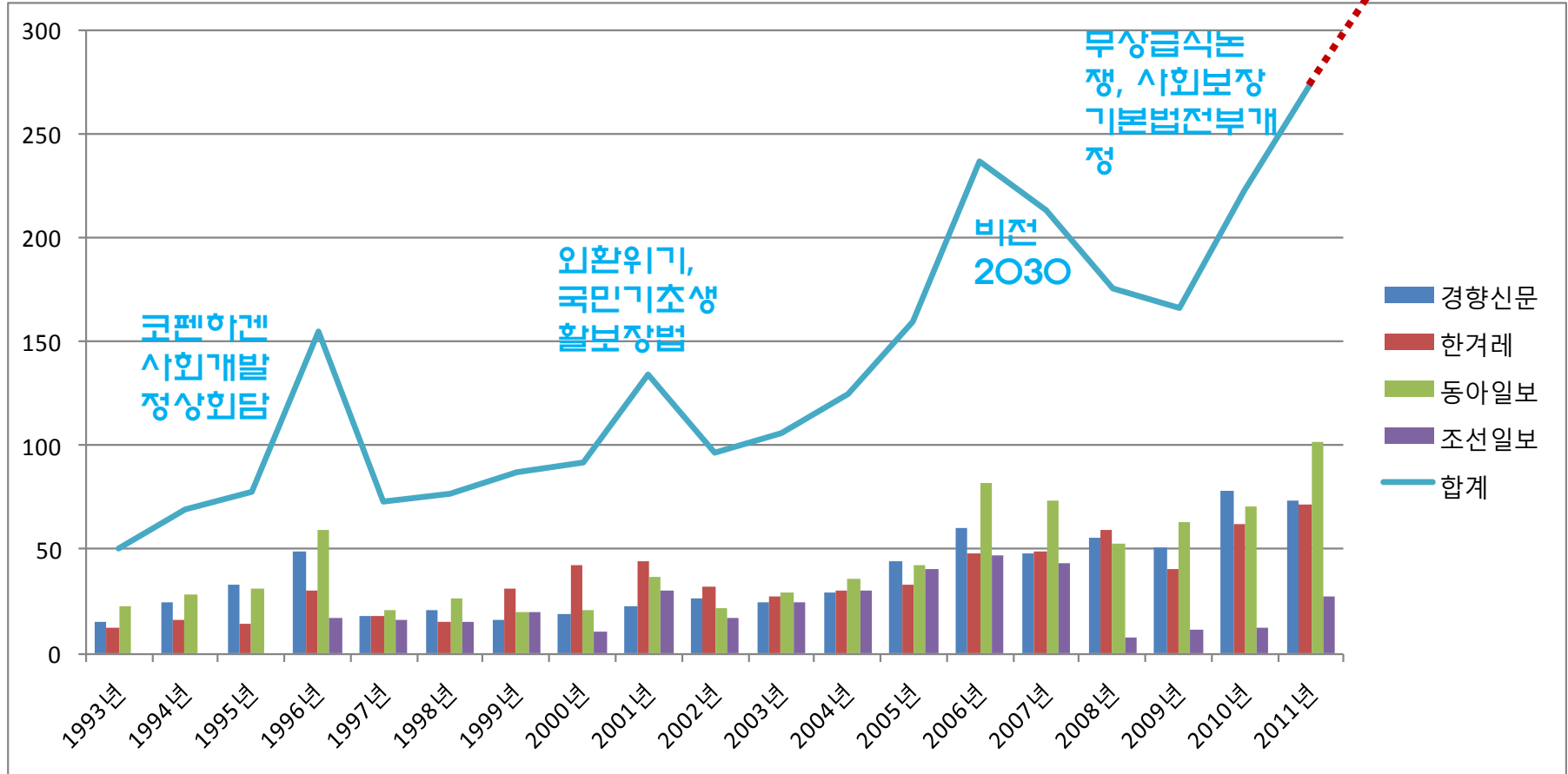
한국형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?

서울대 안상훈 교수

제 1 장

복지, 더 이상 미룰 수 없다!

미루고 미루다 터져버린 복지정치



주요일간지 복지관련 신문사실 수의 변화
 (자료출처: 안상훈, 2011,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전략
 의 지속가능성, 경제논집 제50권 제3호,
 pp.263~293)

복지지체와 경제의 빨간 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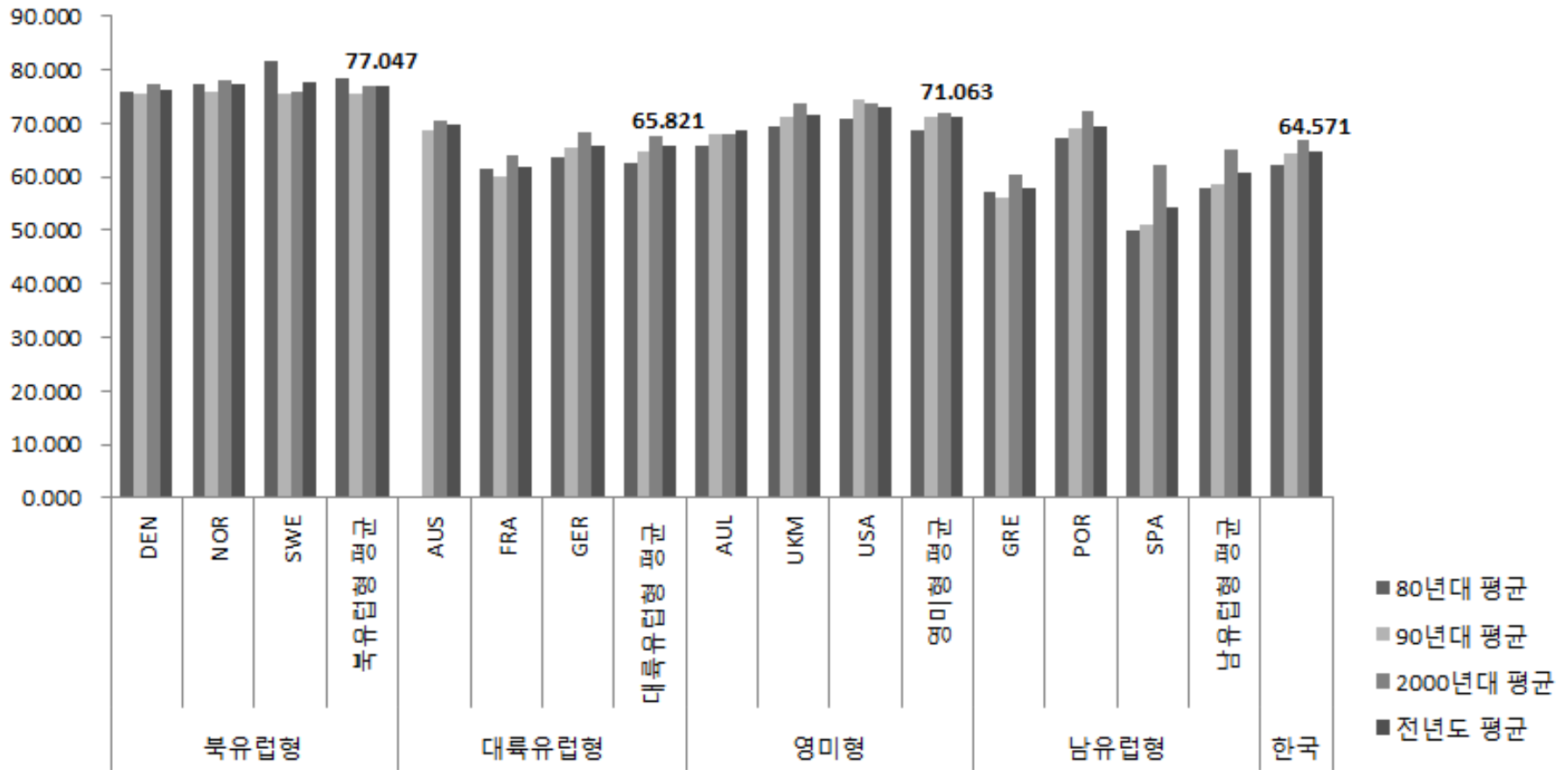
- 고용 없는 성장
 - 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는 혁신이 관건
 - 기술중심의 지식산업화, 첨단산업화와 “노동의 종말”
- 양극화
 - 슈퍼리치의 출현과 계층상승의 종언
 - 중산층의 감소
- 양성불평등
 -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가부장주의의 지속
- 복지재정위기
 - 저성장, 실업,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원의 축소

→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필요하다!

→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로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!

주요국의 고용률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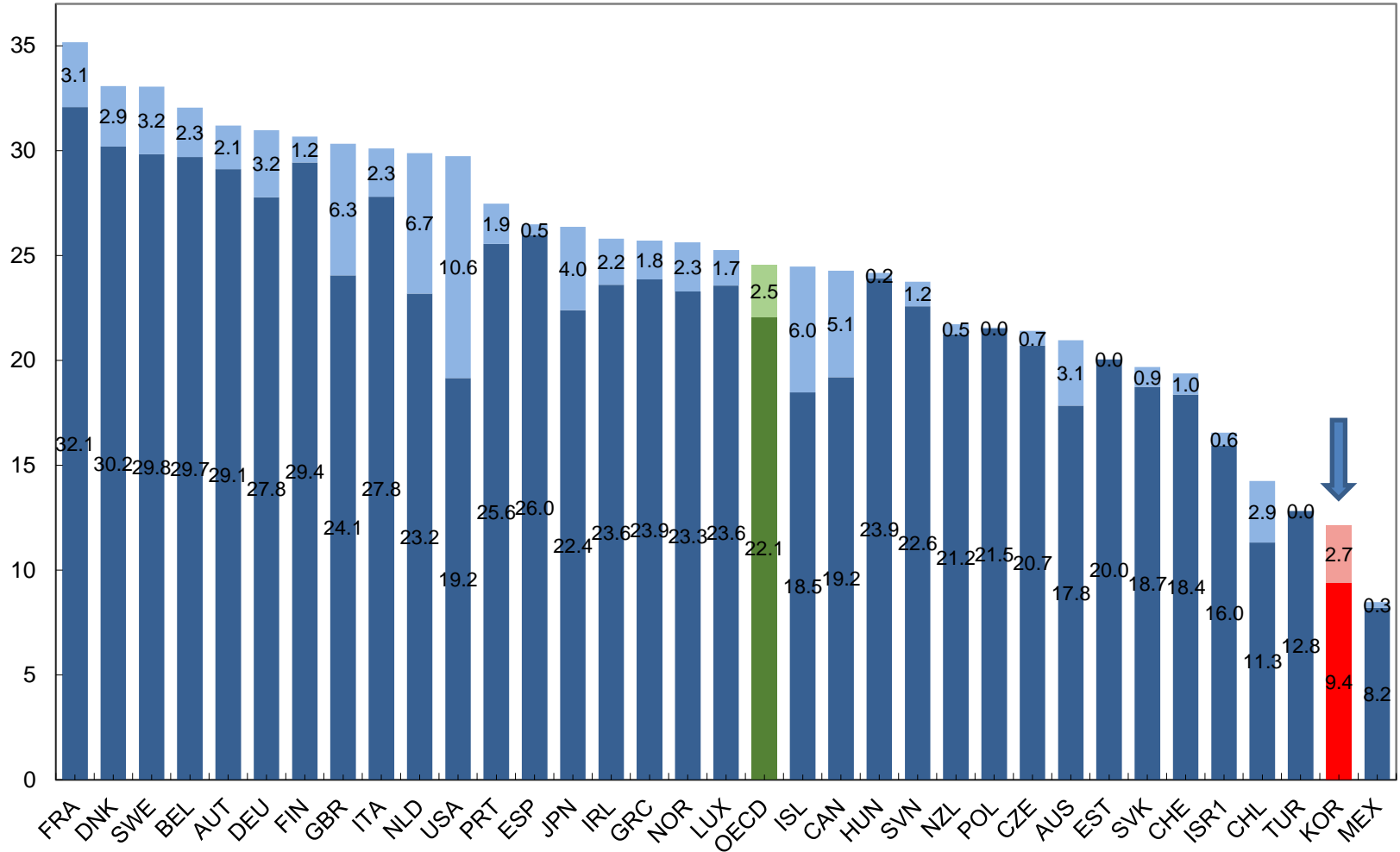
출처: OECD employment and labor statistics



공공 민간 사회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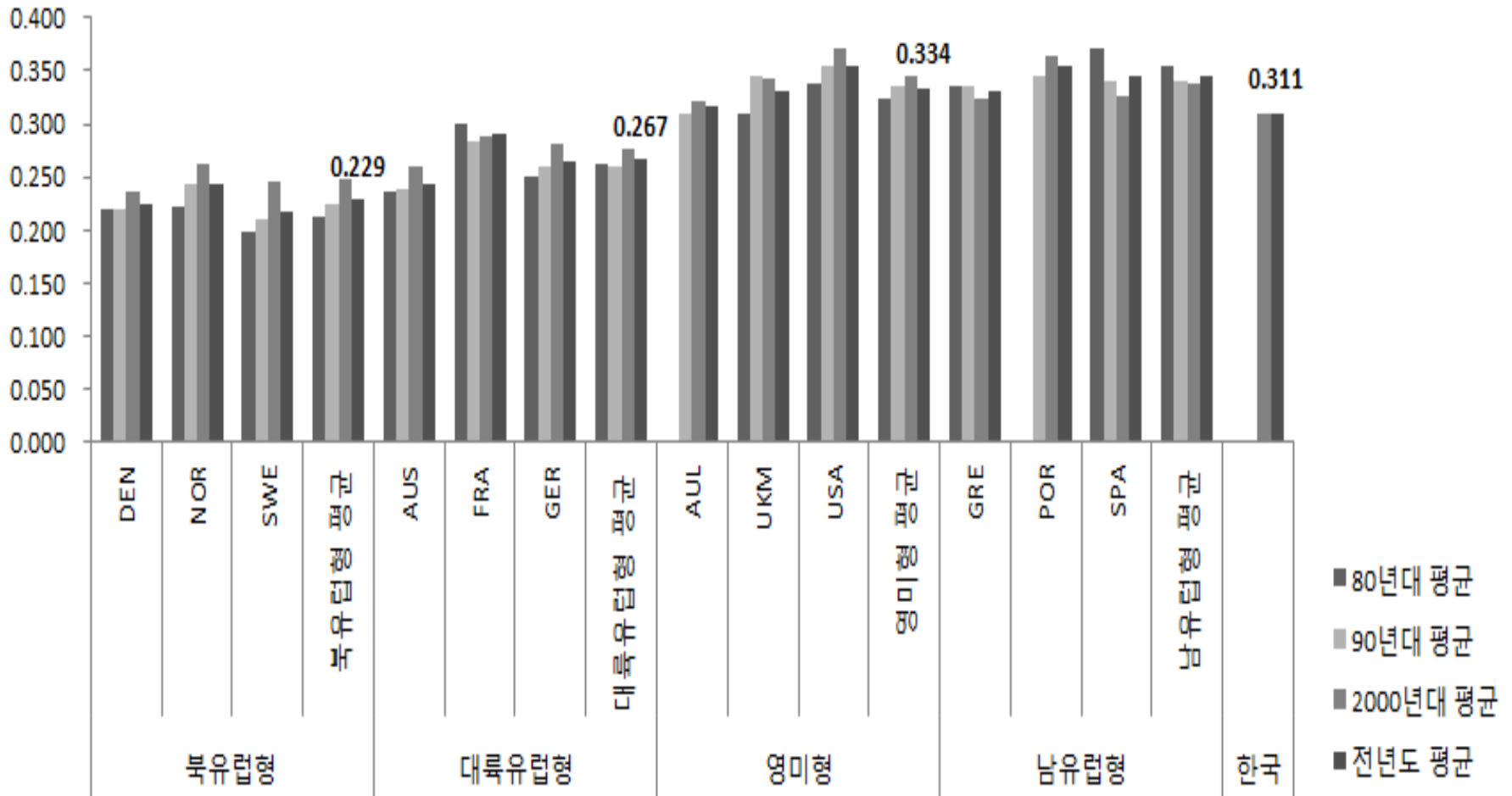
(% GDP, 2009)

■ Public ■ Priv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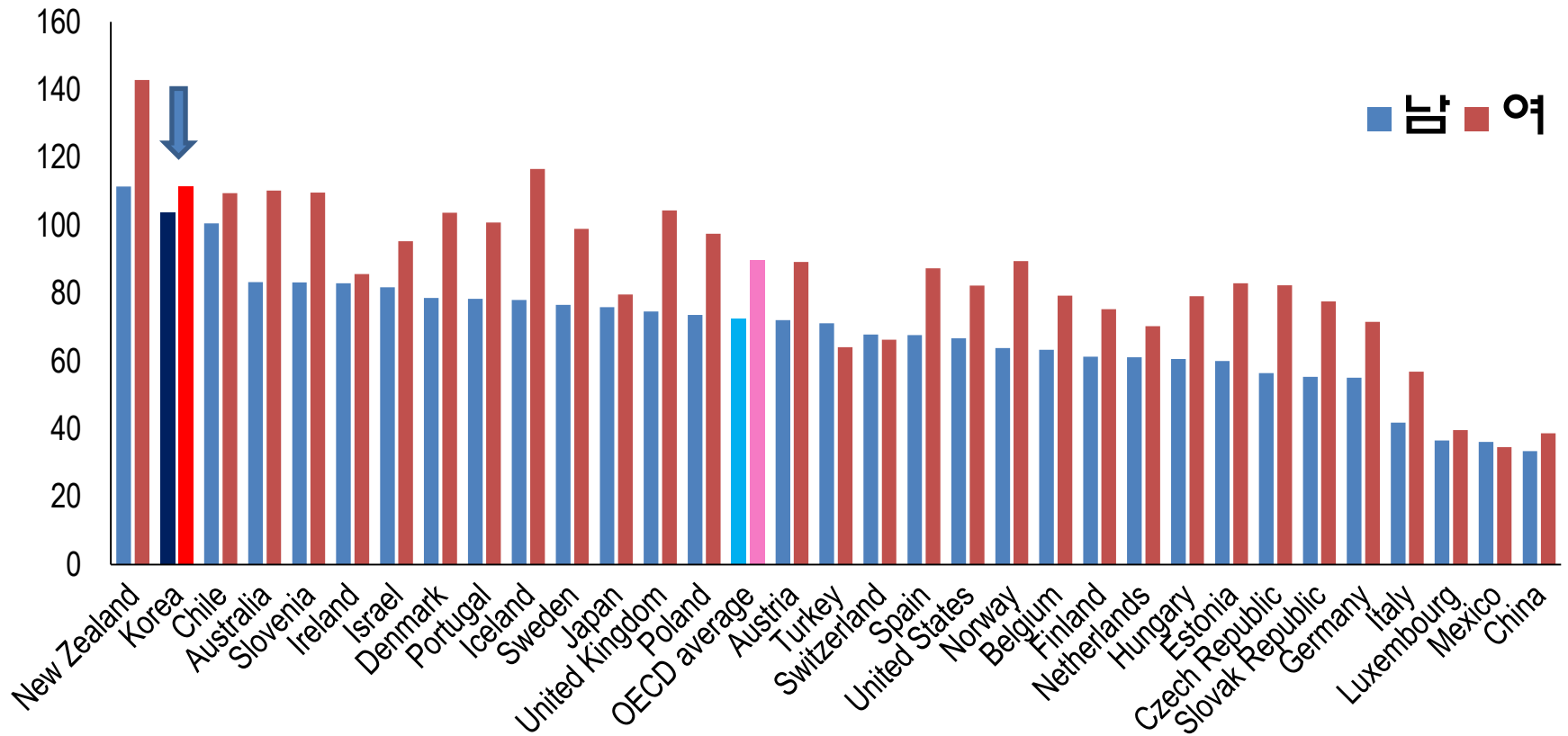


주요국의 지니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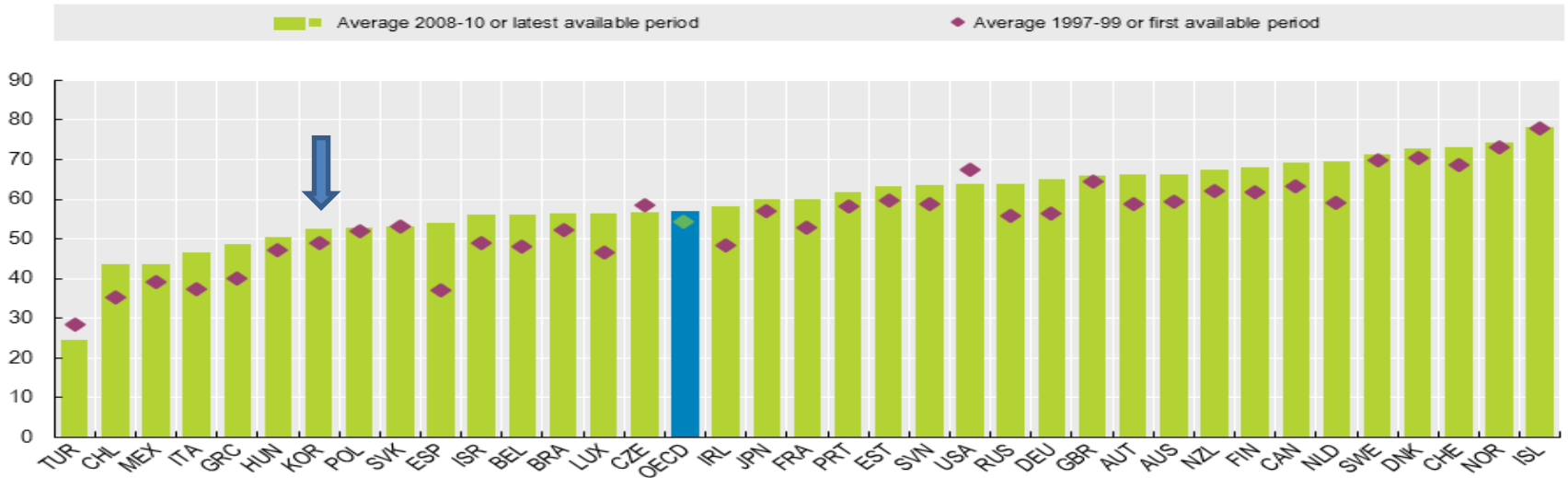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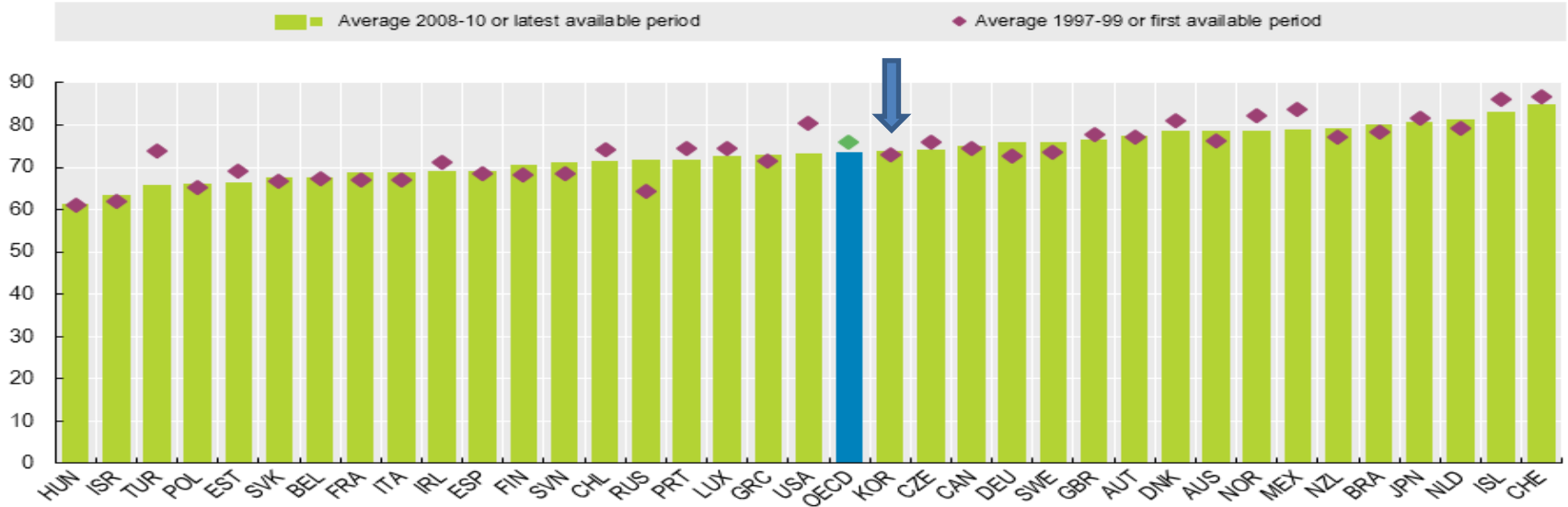
(출처: OECD stat.)



성별 대학진학률 수준 (2010, Tertiary-type 5A, 5B Tota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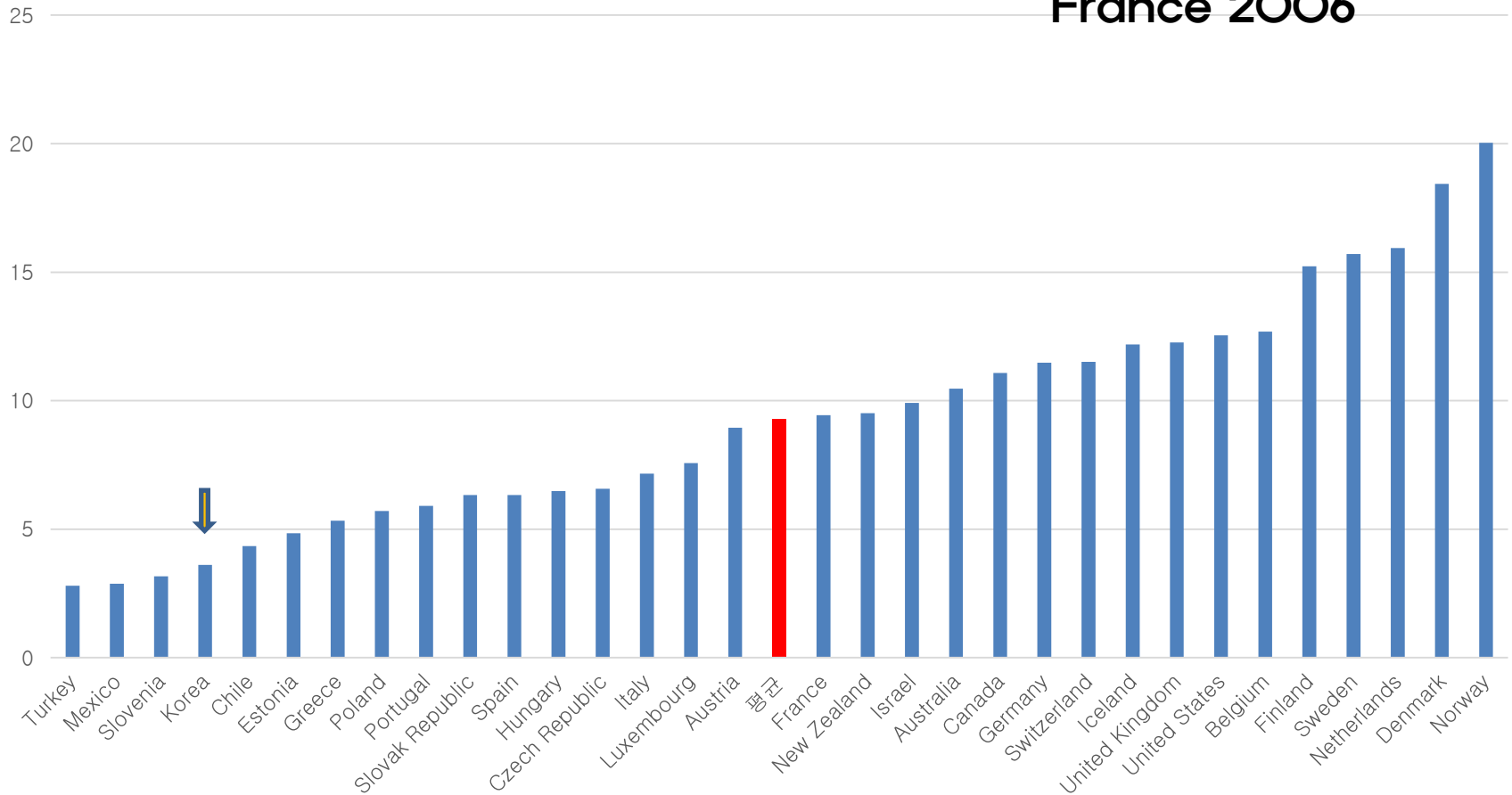


고용률: 남성(상) 여성(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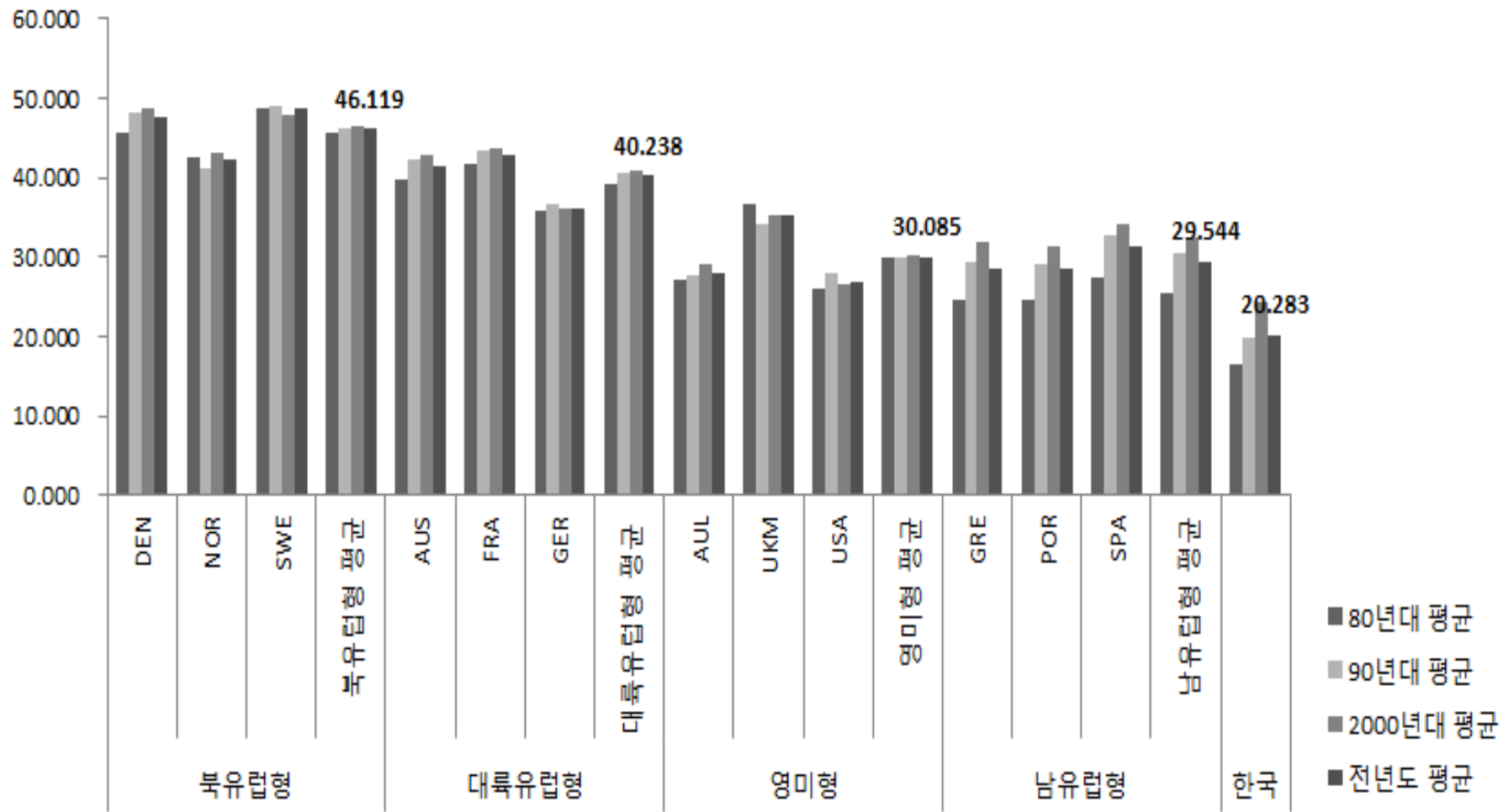
건강 및 사회 고용(2008)

단, Chile 2011,
Greece, Poland 2007,
France 2006



주요국 국민부담률(GDP%)

출처: OECD Tax statistics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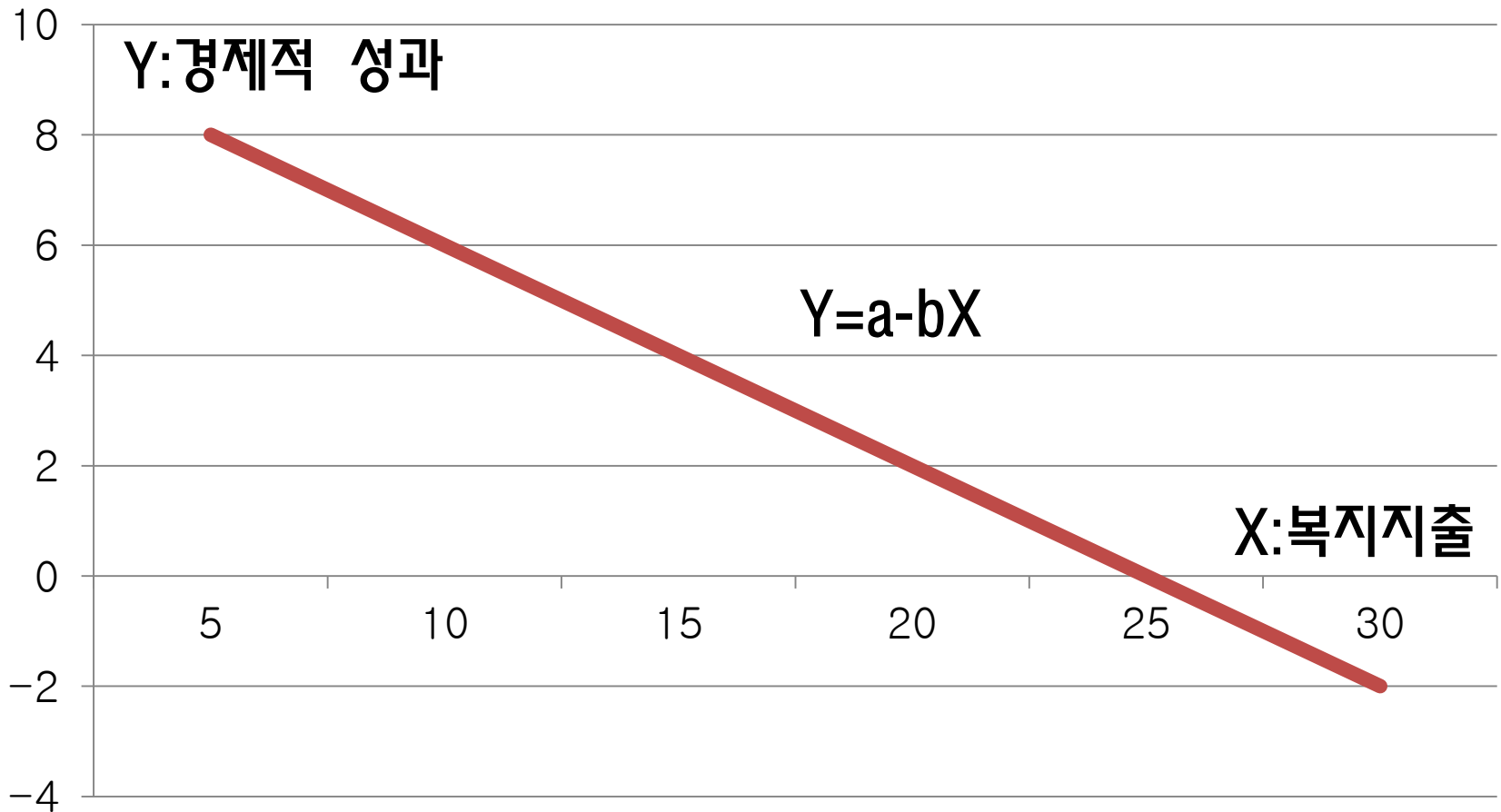
제 2 장

복지, 어떻게 해야하나?

“사회서비스 전략”

- 복지국가모형은 지속가능해야 함
 - 복지국가의 확장은 여전히 필요, 어떤 복지국가가냐가 관건
 - 정치적, 경제적,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동시 고려하는 모형 필요
-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, 동일욕구에 대한 기능적 등가물?
 - 정치적·경제적으로는 상이한 결과잉태
 - 경험연구에 의하면, 사회서비스를 강조하는 모형에서 정치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음(4대 난제의 해결에서 우월)
- 사회정책의 내용구성을 20세기형 현금급여 중심에서 21세기형 고용창출형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전환
 - 현금급여를 합리적이고 건전재정 혹은 시장 친화적인 수준에서 관리
 - 동일한 욕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중심 처방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및 여성고용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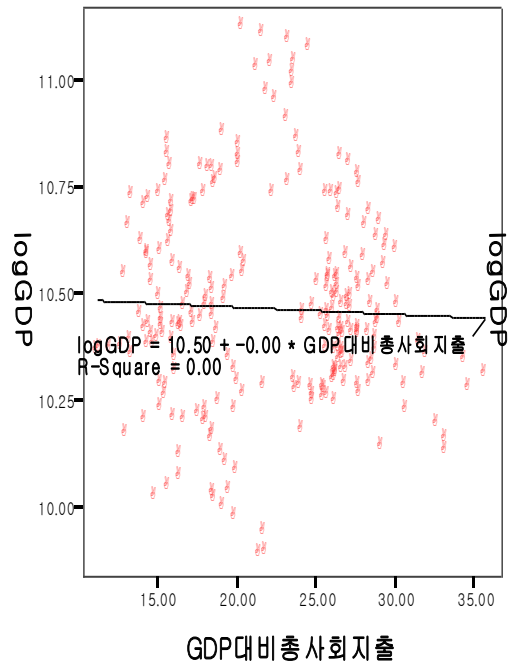
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유럽병 가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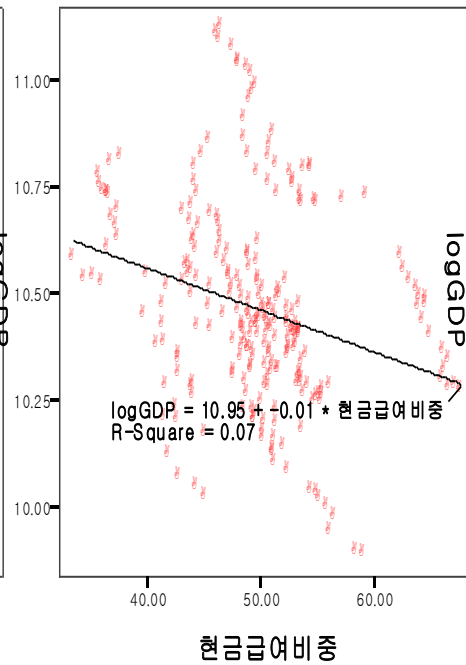
‘복지병’ 혹은 ‘유럽병’ 이 사실일까?

로그실질GD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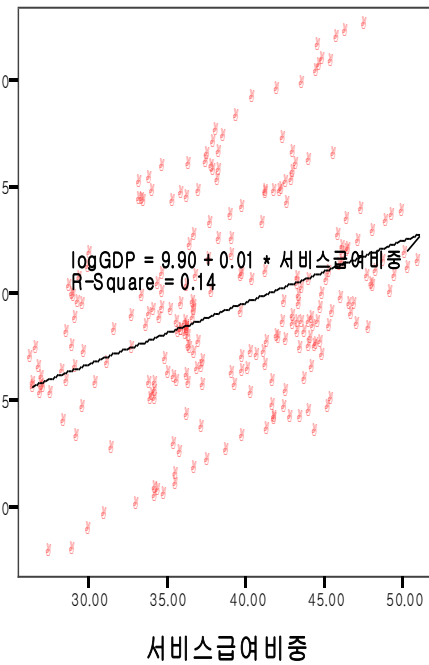
총사회지출-Log실질GDP



현금-Log실질GD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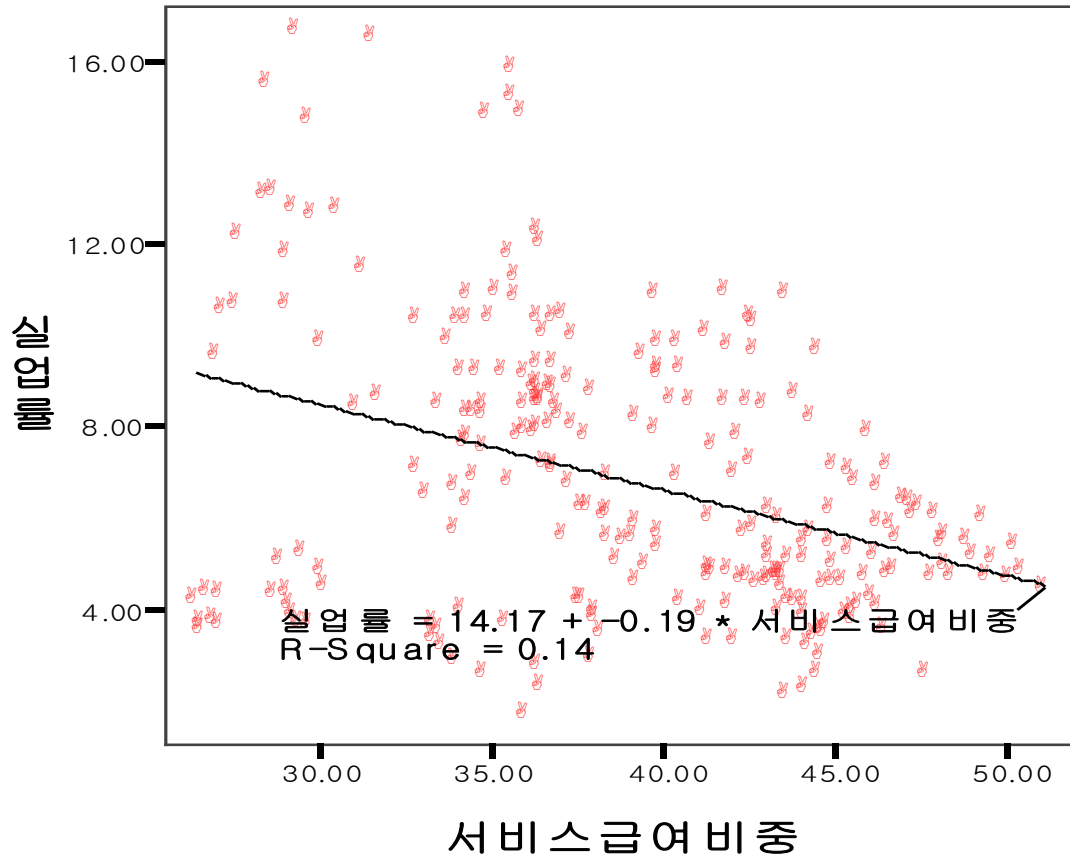
서비스-Log실질GDP



왼쪽 부터 b의 p-value는 각각 .523, .000, .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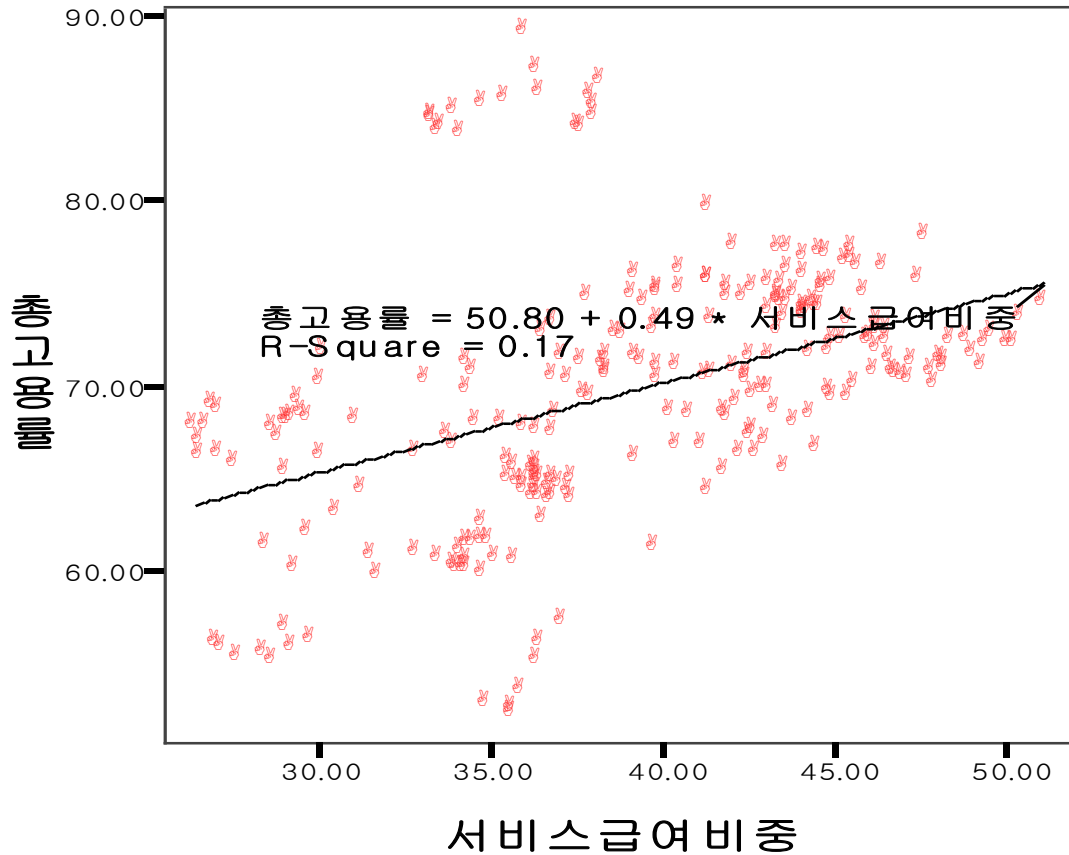
실업률

서비스-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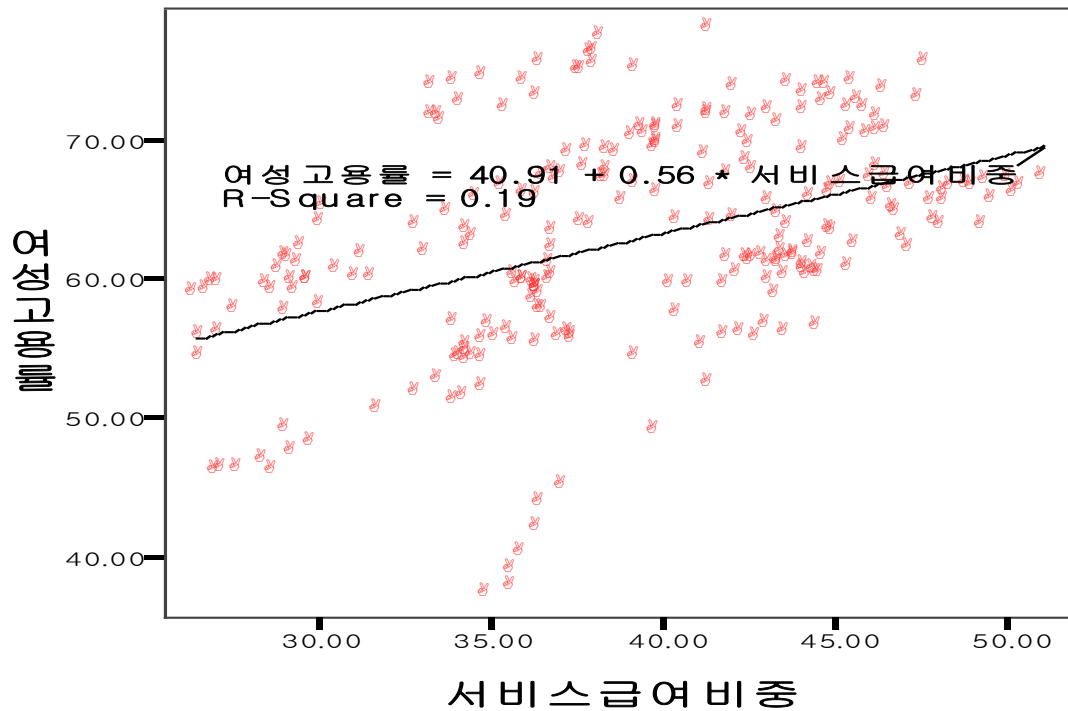
고용률

서비스-총고용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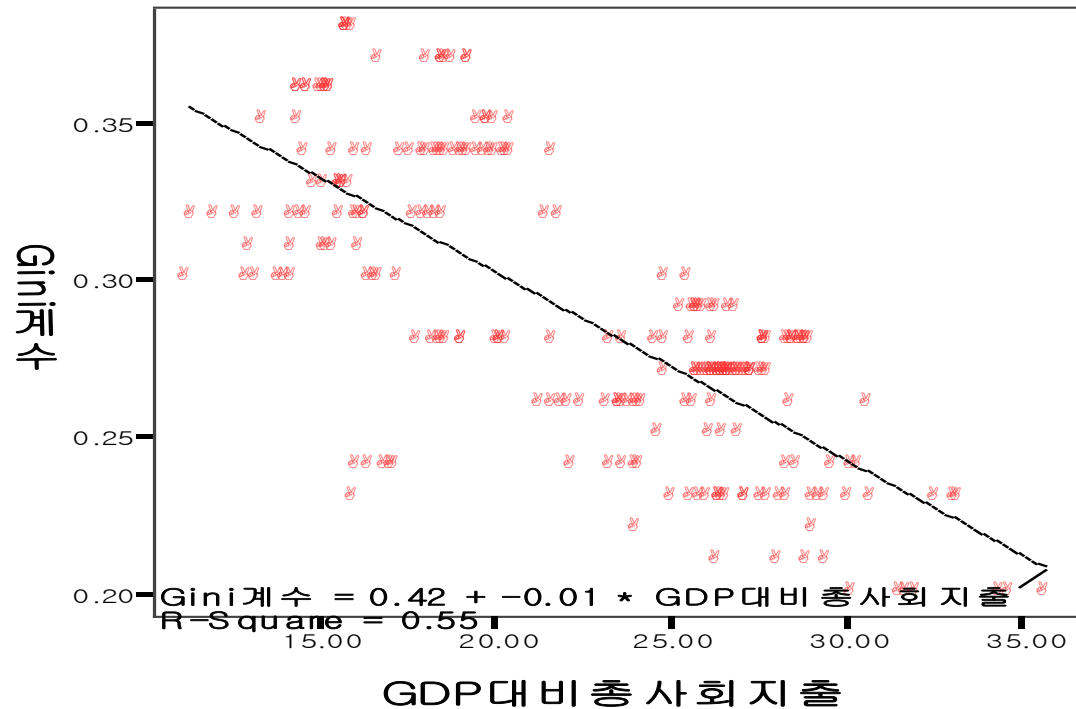
여성고용률

서비스-여성고용률



지니계수(총사회지출)

총사회지출-Gini계수



복지국가별 중산층의 크기

국가	중산층 가구비중 I*	중산층 가구비중 II**
스웨덴	52.7	75.8
노르웨이	45.3	70.5
독일	43.9	66.5
프랑스	39.4	62.5
영국	32.6	56.3
미국	27.3	50.4

- 출처: Luxemburg Income Study(WAVE 4)
- 주: *중산층 가구는 중위가구소득의 75%에서 125%사이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함;
**중산층 가구는 중위가구소득의 75%에서 200%사이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함

제 3 장

재원마련, 어떻게 해야 하나?

“부담과 복지의 조화”

- 권리와 의무의 조화는 보편적 가치
 - 세상에 공짜복지는 없다 (물론, 현세대를 위한 무상복지는 국채발행으로 가능).
 - 의무 있는 곳에 권리 있다.
- 부담과 복지의 조화 = 공정복지 (세금/보험료/이용료)
 - 고부담 고복지 (북유럽국가)
 - 중부담 중복지 (영미국가)
 - 저부담 저복지 (동아시아국가)
- 부담과 복지의 부조화 = 불공정복지
 - 저부담 고복지 → PIGS 국가의 모럴헤저드와 재정위기
- 공정한 재원분담의 전제조건 = 조세정의확보(국민수용성)
 - Welfare politics = tax politics
 - 복지효율화, 세출구조조정, 지하경제양성화, 정의로운 조세개혁(보편+누진)
 - 단기적으로 증세부터 먼저 말하면 조세정의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불가
 - 장기적으로 증세를 포함한 부담과 복지의 조화에 관한 “사회적 대타협” 필요 (PIGS국가와 북유럽국가의 근본적 차이!)

복지국가 지출구성과 조세저항, 국민부담의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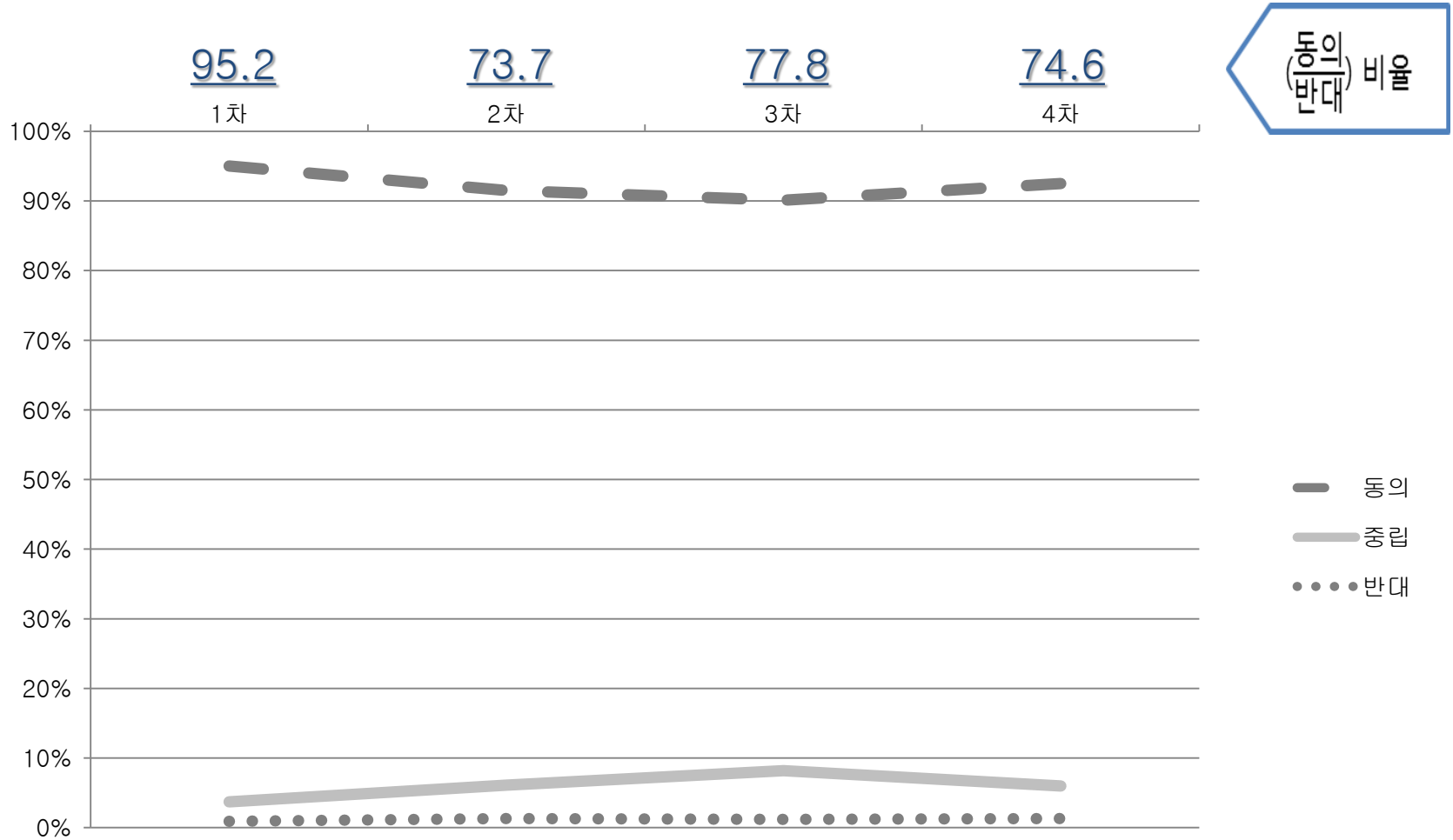
유형	총사회지출	조세저항	국민부담률
사회서비스강화형	27.96	0.77	44.83
사회보험형	26.16	1.40	43.60
공공부조형	16.34	2.19	30.55

- 주1: 퇴직세대 대비 근로세대의 지출비중 OECD, 2004; 선별주입은 총사회지출 중 현금성 공공부조의 비중(%); 총사회지출 OECD, 2004; 조세저항은 ISSP(Role of Government III), 1996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한 정부역할 증가 질문에서 찬성대비 반대의 비율로 계산함; 지니계수 LIS Wave V, 2000; 국민부담률 Forbes, 2001
- 주2: 포함된 나라는 사회서비스형은 스웨덴, 노르웨이, 독일, 사회보험형은 프랑스, 이태리, 공공부조형은 미국, 호주임

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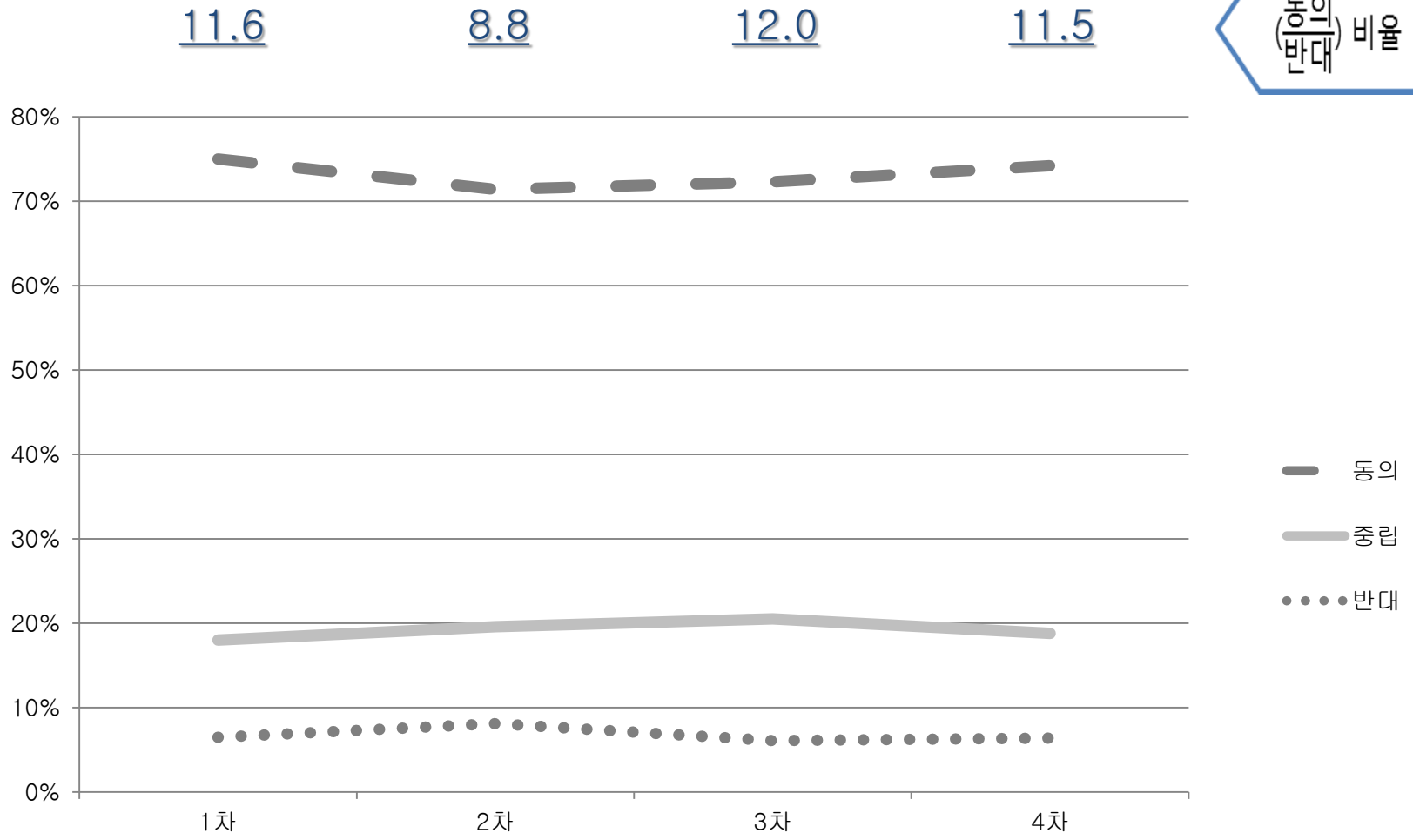
구분	1차	2차	3차	4차
모집단	만 20세 이상	전국(제주도 포함)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		
표본크기	1,202명	1,207명	1,209명	1,200명
표본할당기준	주민등록 인구통계 2006.10.기준	2008.10. 기준	2010.10. 기준	2011.10. 기준
표본추출방법	다단계 층화 무작위 추출법			
표본오차	± 2.8%(95% 신뢰수준)			

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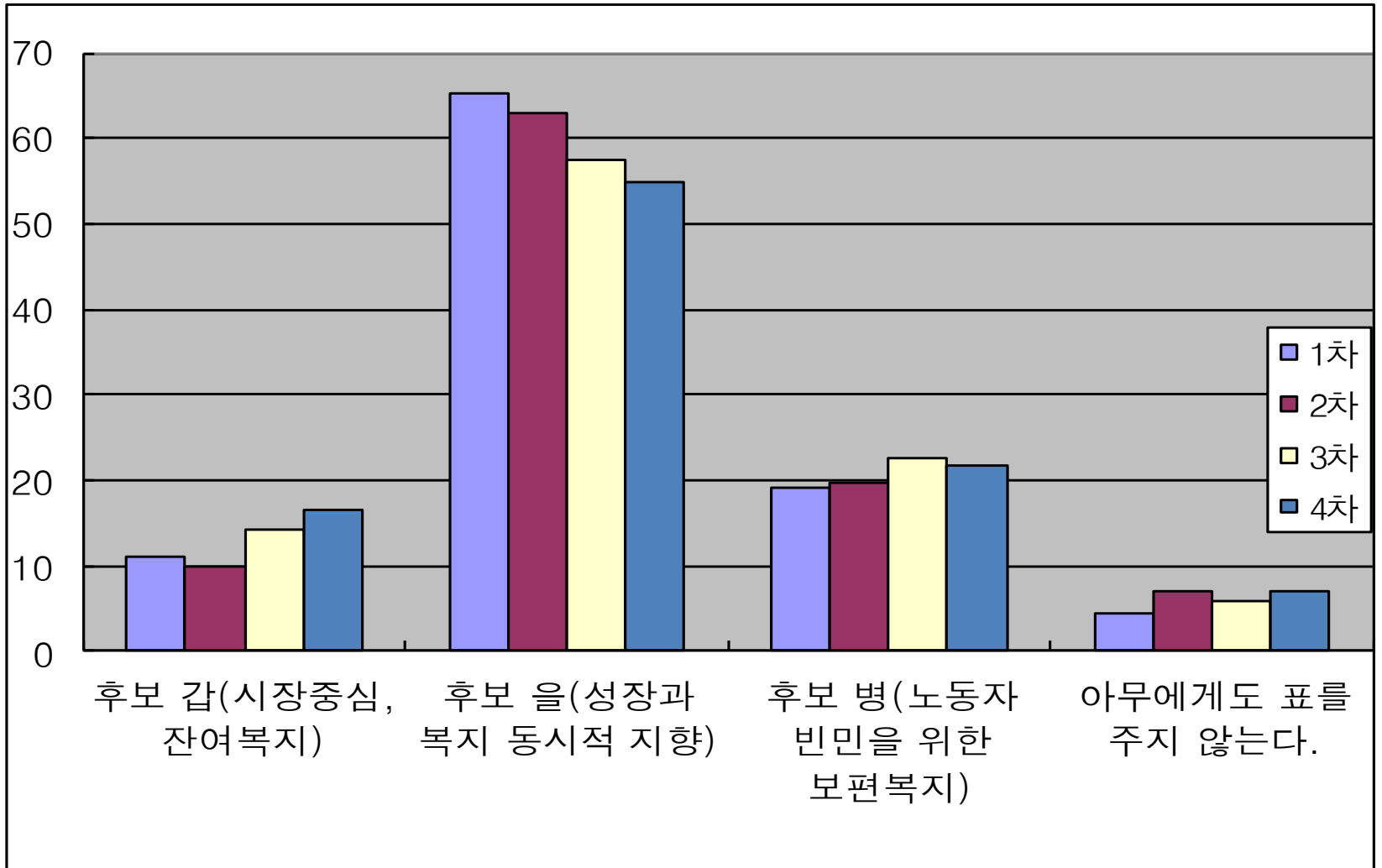


소득격차는 정부책임이다!

(동의) 반대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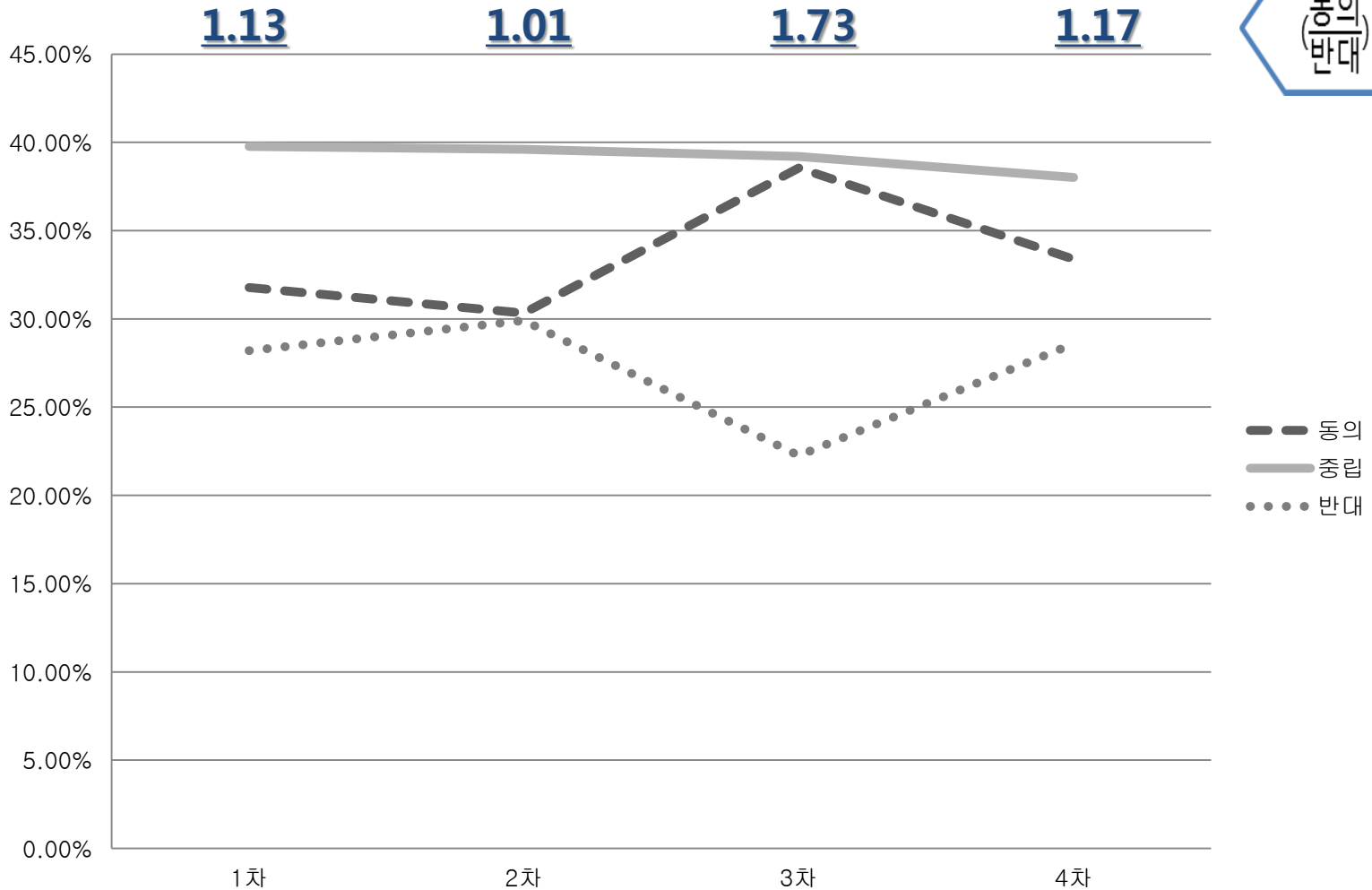


복지이념별 정당지지 성향



복지확대를 위한 중세필요성

중립
(동의/반대) 비율



선별복지지에의 동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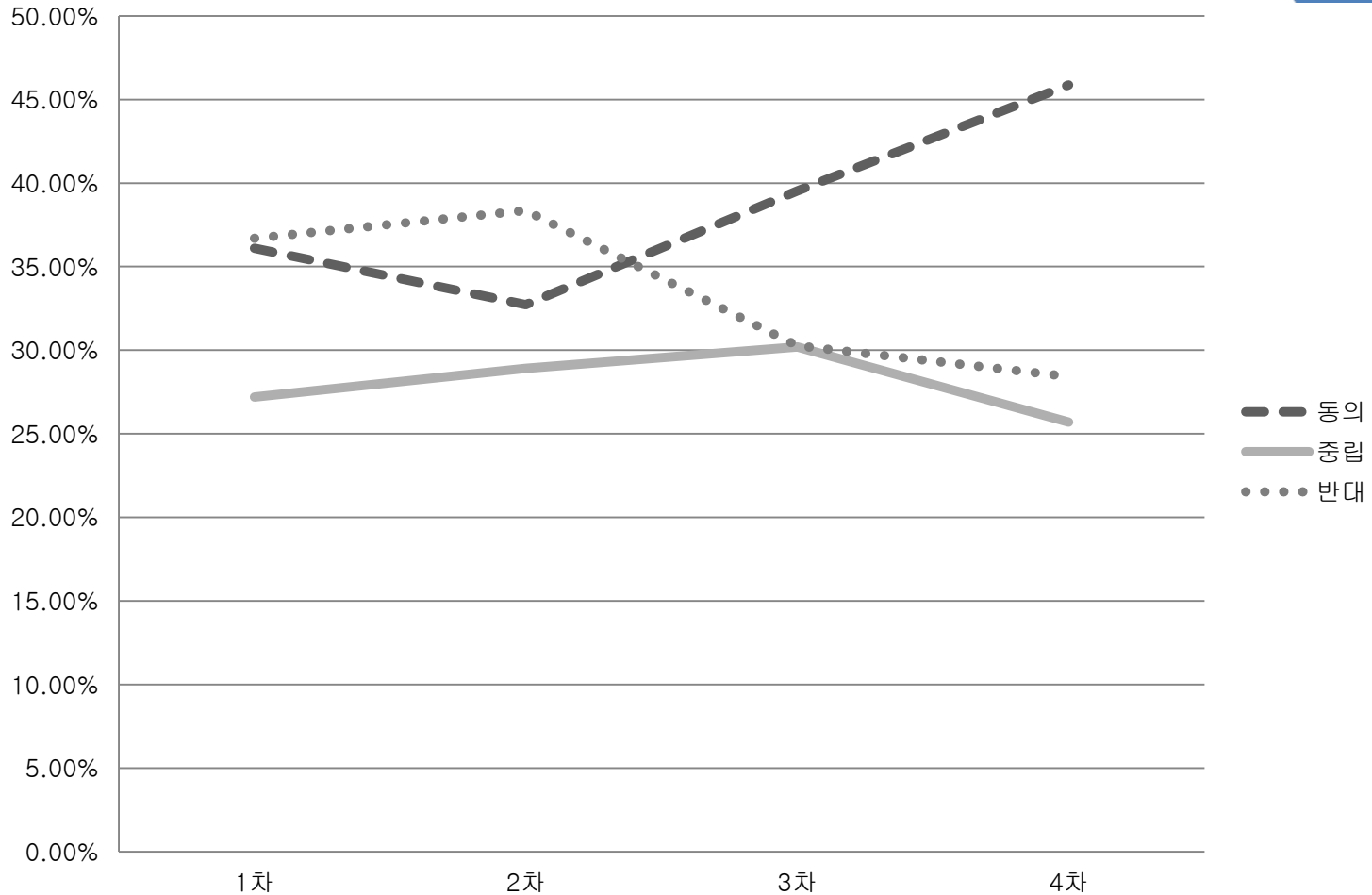
0.98

0.8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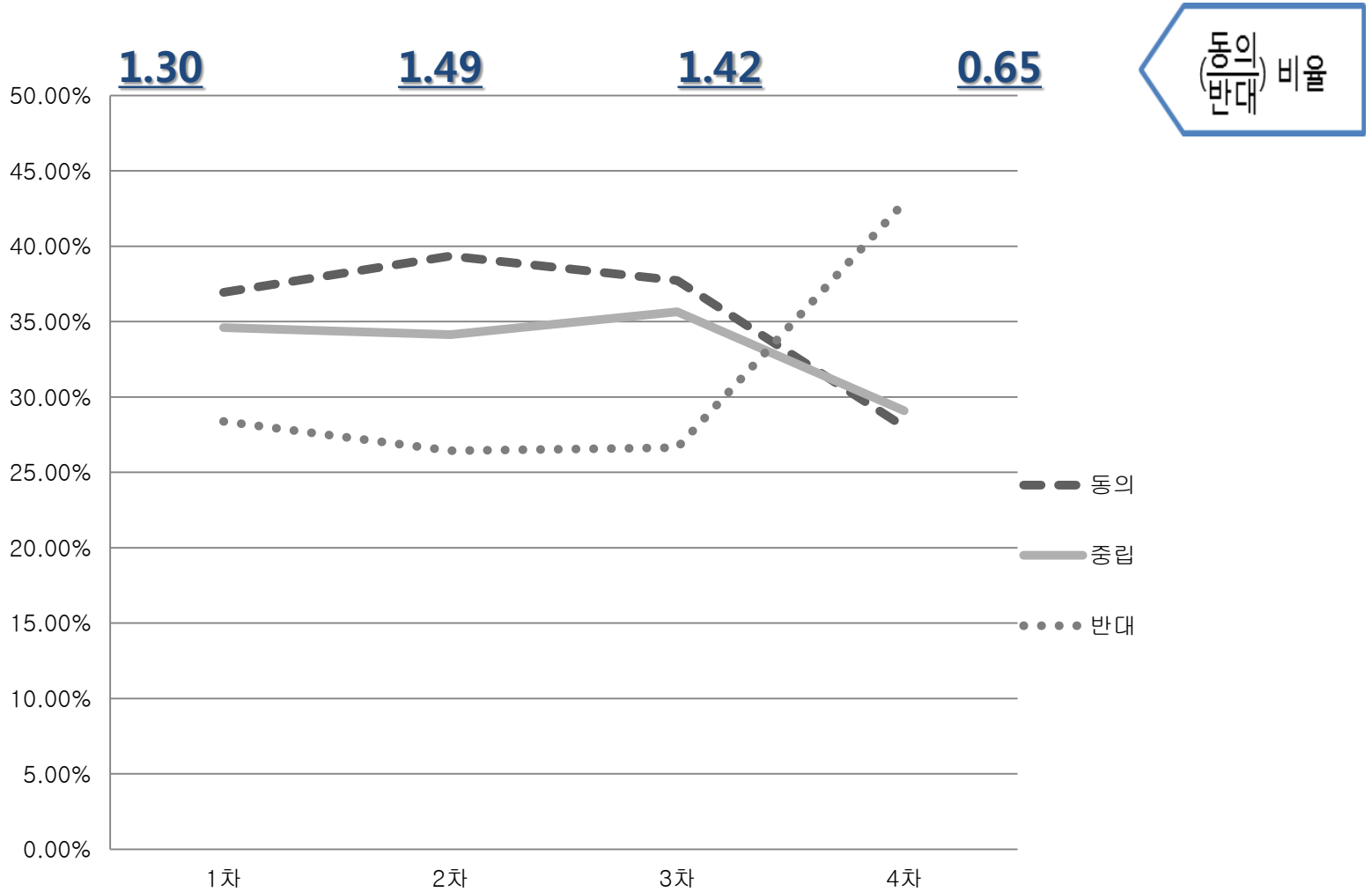
1.31

1.61

(동의/반대) 비율



무상 대학교육



제 4 장

결론

“한국형 복지국가 전략”의 필요성

-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, 북유럽형의 경제적, 사회적, 정치적 성과가 두드러진다... 그렇다면 “스웨덴식 보편모델”이 무조건 정답일까?
 - 수준과 속도를 조절하는 한국형이 필요하다! 왜?
 - 복지국가의 거시적 환경이 다르다: 자본주의 황금기 vs. 자본주의 정체기
 - 고령화 속도가 5배 이상 빠르다: 14%→20%: 스웨덴 42년 vs. 한국 8년
 -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: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북한주민 복지비용
- 한국형 복지전략의 단기과제
 - 고용창출형 사회서비스 전략을 강화(현금: 선별주의; 서비스: 보편지향)
 -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 해결
 - 복지효율화, 세출구조조정, 지하경제양성화
 - 공정한 부담과 복지 수준에 관한 국민적 대타협
 - 선거정치에서 사회협약으로

“이제, 고용친화형
사회서비스전략으로
한국 자본주의의
업그레이드를!”

감사합니다